

사회복지 주간 동향(23.12.18.~12.22.)

1. 용인시 정책 동향

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

용인특례시,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

< 복지 대상자 눈높이 맞춘 정책 수립...다양한 의견 반영해 복지 혜택 확대 높게 평가 >

- * 용인특례시(시장 이상일)는 경기도의 ‘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결과 평가’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힘
-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방안과 복지자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4년 단위로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다. 경기도는 정책 이행 결과와 지역 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
- 지난해 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10대 추진 전략과 5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
- 사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높은 목표 달성도를 기록했고, 2024년 시행계획은 8개 전략, 34개 세부 사업을 반영해 경기도에 제출
- 시는 ▲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▲용인이웃지킴이 운영 ▲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▲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▲용인어린이 상상의 숲 운영을 통한 시민 문화 체험 확대 ▲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한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음
- 시 관계자는 “지역의 복지 활성화를 위해 민·관이 적극 협력해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”며 “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함

※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(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)

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

“사랑은 추울 때 움직이는 것” 오늘도 36.5도 용인

< [2023. 12. 17] 연말연시'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'...따뜻한 시민의 '나눔특례시' >



※ 서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

- * “사랑은 추울 때 움직이는 것” 이것이 용인특례시 연말연시 이웃돕기 릴레이인 ‘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’를 표현하는 한마디가 아닐까 한다. 오늘도 36.5도 체온을 지닌 용인의 가슴이 뛰고 있다. 많은 시민과 단체들의 기부 열기가 그 온기를 유지하는 힘이다. 이번 한 주간 사랑의 열차에는 누가 탑승했을까?
- * 세계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(주지 현성스님) 백암면에 성금 1000만원 기탁
 - 세계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(주지 현성스님)는 지난 11일 백암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
 - 불광사는 지난해에도 백암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열차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
 - 현성 주지스님은 “추운 겨울이 되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마음이 더욱 얼어 붙는다”며 “이분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불자들과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”고 말함
 - 백암면 관계자는 “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”며 “기탁받은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”고 말함
- * 주식회사 대광텍스타일, 1200만원 상당의 양말 5100켤레 기부
 - 주식회사 대광텍스타일(대표 신동주)은 수지구 죽전1동에 지역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1200만원 상당의 양말 5100켤레를 기탁
 - 신동주 대표는 “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양말을 기부하게 됐다”며 “기부한 물품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란다”고 말함

***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‘해피 크리스마스’ 위해 저소득 가정 아동 30명에게
운동화 상품권 전달**

-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민간위원장 권영지)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역
저소득 가정 아동 3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운동화 상품권을 전달

· 권영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장은 “아이들이 따뜻하고 행복한
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 운동화를 선물하고 싶어 상품권을
전달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소외받는 아동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”고 말함

*** 서농동 더원사랑의교회도 15일 지역 아동들을 위해 써 달라며 크리스마스 선물
꾸러미 25개와 방역 마스크 5000장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**

- 더원 사랑의교회는 매월 홀로 어르신 5가구에 밀반찬을 지원하고, 아동 3
명에게는 장학금 10만원씩을 지원해 오고 있음

※ 용인시 보도자료

참조(삼가동/모현읍/역북동/원삼면/중앙동/백암면/원삼면/영덕1동/마북동/서농동/구갈동/
영덕2동/구성동/동백3동/상하동/상현2동/상현1동/성북동/죽전1동/죽전3동 맞춤형복지팀,
수지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)

2. 중앙정부 정책 동향

1 중앙정부 복지현안

‘고립·은둔 청년 지원방안’ 관계부처 합동 발표

< 2023 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, 관계부처 합동, 「고립·은둔 청년 지원방안」 발표 >
< 정부 차원 첫 개입, 21,360명 정책대상자 발굴, 1,903명 즉시 지원 >



1. (발굴) 고립·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

- * 고립·은둔 청년 대상 중앙차원의 상시 발굴체계가 구축
 - 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하여, 24시간 누구든지 고립·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고립·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비대면·온라인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 창구를 마련('24.下~)
 - (온라인) 대국민 정부 포털사이트, 청년 이용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배너 연계 구축
 -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, 편의점 등 주변에서도 위기징후가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별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하여,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
 - 도움 요청은 '24년도 고립·은둔 청년 시범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과 연계하여 사례관리사의 현장방문, 초기상담 등 통한 전담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
 - 복지부 청년인턴을 활용해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고립·은둔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집중 발굴 및 온라인 자가진단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, 지자체-경찰-소방-지역주민(고시원, 원룸촌, 편의점 등)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망과의 협조체계도 강화
 -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공식으로 공적 도움을 요청(개인정보 제공 동의)한 당사자들도 1,903명이나 나타남,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가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에 들어갈 예정

- 고립·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전담기관 내 탈고립·은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립준비와 병행하여 고립·은둔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('24.~, 6개 시·도 10명)
- 2. (전담지원체계) 2024년 고립·은둔 청(소)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
 - * 2024년 4개 지역에 지역 내 고립·은둔 청(소)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관((가칭) 청년미래센터)가 설치
 - 공모를 통해 4개 광역시·도를 선정하여 고립·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('24년 약 13억 원, 총 32명 전담인력)을 실시할 예정으로, 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 배치된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후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
 -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 및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확대를 추진할 계획
 - *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
 - 초기상담 시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따라 '청년마음건강서비스'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, '일상돌봄서비스'를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청년들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,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1인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낮추고, 혼자 갑자기 아픈 경우 등에 대비한 인적 보호망을 강화
 - 읍면동, 복지로 사이트 신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통해 의뢰된 대상자에 이용권(바우처) 지급, 등록된 민간기관에서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(총 10회)
 - 돌봄·가사·병원동행·식사·영양관리 등 바우처 서비스(23년 시작, 현재 51개 시군구 실시 중, 23년 196억 원 → 24년 335억 원)
 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2024년부터 고립·은둔 전담 사례관리 인력들이 배치될 예정(총 36명)이며,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활용, 보건복지부, 여가부와 협업하여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 청년특화 공동생활·커뮤니티 등 필요한 공간 마련을 도울 계획
- 3. (예방) 학령기, 취업,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
 - * 2024년부터 13~19세 학령기,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,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
 - 학교 내 '(가칭)통합지원팀'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하여, 학교폭력,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
 -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('23. 96개교 → '24. 248개교)
 -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'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'로 연계하도록 하여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임 아래 지역 사회 내 위기학생들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
 -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,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(가칭)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('24년 10개 지자체, 224억 원)하고,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('23년 408억 원/8천 명 → '24년 425억 원/9천 명)하는 등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

상담, 사례관리와 함께 적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

- 일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이 부담없이 지역사회로 나와 일상생활을 하고, 구직의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, 심리상담 등 제공하고 각종 청년 정책 등 지원 연계
- 아울러 온보딩(On-Boarding) 프로그램을 신설('24년 44억 원)하여 경직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취업초기 청년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
- CEO 등에게는 MZ 직무관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청년친화적인 조직 문화 교육을,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조직 내 성장방법, 소통·협업 등 교육 제공
- 또한,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케어프로그램을 확대하여('23년 5개소 → '24년 9개소)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

4. (관리·제도화)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, 법적근거 마련

- * 사례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(희망e음)을 통해 지원하고,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,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관리체계도 효율화
- * 2년간의 고립·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, 정보 보호,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

※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

2 중앙정부 복지현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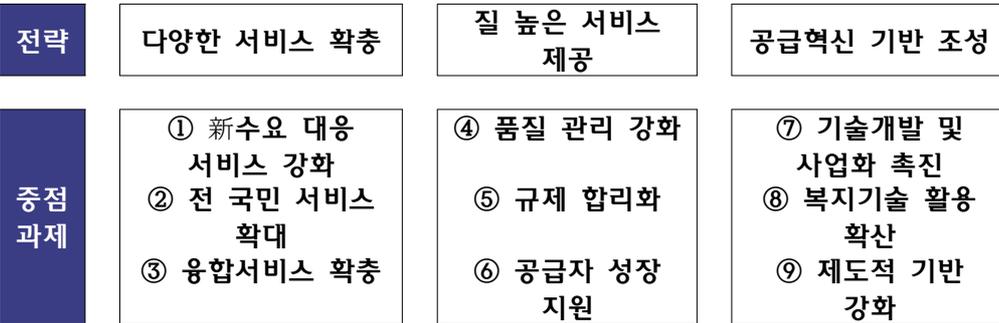
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

< 보건복지부, 「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(2024~2028)」 발표 >
 < ▲다양한 서비스 확충 ▲질 높은 서비스 제공 ▲공급혁신 기반조성 등
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 제시 >

* 「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(2024~2028)」은 ‘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’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, ‘다양한 서비스 확충, 질 높은 서비스 제공, 공급 혁신 기반 조성’ 등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

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

목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



- * 첫 번째 분야는 ‘다양한 서비스 확충’
- 우선, 저출산·고령화, 1인가구화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,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·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, 청·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(’23. 51개 시군구 → ’24. 100개 시군구)
 - 최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마음 건강(검진주기 10년→2년, 검사질환 확대)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·예방사업 확대(’23. 39개 시군구 → ’24. 전국) 등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감,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경감 및 노인일자리 지원도 확대(전체 노인의 10%)
 - 비정형적이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도 확대, 코로나19 발생 시기 저소득층 등에 제한적으로 제공하였던 긴급돌봄 서비스를 ‘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’을 대상으로 확대 개편(’24~)하고, 영유아 시간제 보육(’23년 2만명 → ’27년 6만명 이상),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 등 틈새 돌봄도 확대
 - 이와 함께 기존의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기초적·필수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며, 고용·문화·주거·환경 등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

- * 두 번째 분야는 ‘질 높은 서비스 제공’
 - 우선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, 단계적으로 확대(~'28)해 나갈 계획, 또한 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를 기관운영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각종 분야별 서비스 평가체계에 대한 메타평가 도입,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및 평가 결과 공개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
 - 제공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별로 분절적인 제공인력 양성 과정을 체계화하고, 요양보호사부터 보수교육을 의무화('24.1~), 아울러 주요 돌봄인력의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보수 적정화, 업무부담 완화 등 처우개선과 서비스 제공과정의 권익보호도 강화해 나갈 계획
 -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, 대상별·제도별로 분절적인 진입, 종사자 자격, 기관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돌봄분야부터 표준화 및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함, 이를 통해 양질의 기관을 육성하고 역량 있는 공급자의 진입을 촉진, 이와 함께 소수 공급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
- * 마지막 분야는 ‘공급혁신 기반 조성’
 - 복지·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, 자금 조달의 한계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확대 조성
 - 장애인·노인 보조기기 실용화 R&D('24~'28, 382.5억 원),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실증 R&D('24년, 55억 원), 노인·장애인의 자립·재활·돌봄을 위한 R&D 검토 등
 - 이렇게 개발된 복지기술은 현장실증을 지원하여 활용성을 높일 계획, 특히 지역사회서비스와 디지털 기술제품을 결합한 신규서비스를 개발·제공함으로써 복지기술을 지역사회에서 실증하는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('24)하고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의 선도모델을 개발·확산할 계획
 - 근거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개정하여 사회서비스업 통계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, 사회서비스 수요·공급 실태조사의 표본 수 확대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, 사회서비스의 제공기관 /인력/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도 추진할 계획
 - (현재) 복지, 보건, 고용, 교육, 문화 영역 → (개선) 주거, 환경 영역까지 확대
 - '23년 수요 5,000가구, 공급 3,500기관 → '27년 수요 8,000가구, 공급 6,000기관
- * 앞으로 각 지자체는 ‘사회서비스 기본계획’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, 향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
 - ※ 보도자료 참조(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)

3 중앙정부 복지현안

성공적인 복지국가 이행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 발표

< 사회보장 분야 최상위 계획,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(안) 수립 >
< ▲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▲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▲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제시 >

- * 국무총리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(안)이 심의·의결되었음을 발표
 -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(안)은 지난 5월 발표한 「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」을 바탕으로 정책연구,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등 전문가 검토, 관계 부처 협의,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포함
 - 2019년 수립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라는 원칙은 같으나,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를 두텁게 보호하고,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,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강조한 면에서 차이점이 있음

붙임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(안)('24~'28)

I 수립 배경

- * 「정부 복지국가 전략」('23.5. 사회보장전략회의)을 통해 “약자부터 촘촘하게, 지속가능한 복지국가”를 사회보장정책 비전으로 제시
- * 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사회보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5개년 전략·과제 수립 추진

II 정책 여건

- * 저성장, 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재구조화 필요
 - ① 노동시장 이중구조 下 불평등 심화, 개인 간 관계 단절로 고독사, 고립·은둔 등 소외와 배제를 겪는 새로운 취약계층 등장
 - ② 국가는 사회보장 공급체계의 관리자이자 중개자로서 유연성·접근성에 강점을 가진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多주체 협력 필요
 - ③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구조개혁, 통합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 구현 필요

III	비전 및 추진방향		
비전	약자부터 촘촘하게, 지속가능한 복지국가		
목적	국민 삶의 질 향상, 사회통합 증진		
전략	약자부터 두터운 복지	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	사회보장체계 혁신
중점 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②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·지원 ③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④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⑤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⑥ 이용자 중심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⑦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⑧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⑨ 기술 기반 서비스·행정체계 도입
IV	중점 추진 과제		

1.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

- ①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
 - (취약계층) 공공부조 보장성 확대와(생계·의료급여 등) 주요 생활비 영역의 지출부담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
 -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(32%→35%), 재산기준 완화,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,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(47%→50%),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
 - (출산양육) 한부모·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('24년 기준중위소득 63%까지, 월 21/25만원)
 - (의료비) 재난적의료비,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(교육비) 국가장학금, 학자금 대출 지원
 - (기타) 에너지 바우처 대상·단가 확대,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
 - (취약아동·청소년) 학생맞춤통합지원(학업·경제적·정서적지원 등), 위기청소년 (시설퇴소, 학교박) 맞춤형 지원, 한부모·조손가정 등 취약·위기가족 지원
 - (노인·장애인) 기초연금 단계적 확대, 노인일자리 지속 창출('24년 103만 개),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:1 돌봄 지원
- ②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·지원
 - (취약청년)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('24년 50만 원/월), 가족돌봄청년 (자기돌봄비 200만 원/년),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발굴·지원체계 구축 ('24년 4개 시도)
 - (고립·고독사)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빈곤·돌봄 공백·건강 취약 등 고립위험군 (취약 중장년 등) 발굴·지원(고독사 예방·관리 시범사업 '24년 전국 확대)
 - (소외된 약자) 공공후견제도(치매노인, 발달장애인, 정신질환자, 학대피해아동 등) 활성화, 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 모색

③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

- (노동시장 참여 촉진)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강화, 청년(일경험), 중장년(재취업지원) 등 맞춤형 지원, 상병수당 도입 추진
- (노후소득체계)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, 출산·군복무크레딧 지원제도 확대
- (사각지대 발굴·지원) 빅데이터 위기정보 확대, 전국민 위기알림 서비스 등으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긴급복지·긴급돌봄을 통한 신속 지원

2.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

④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

- (돌봄) 아동부터 노년까지,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지원
 - (아동) 어린이집 0세반, 시간제 보육 확대, 아이돌봄서비스 확대, 늘봄학교 확대
 - (청장년) 소득기준 무관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, 중장년 대상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
 - (노인) 장기요양수급자(중증) 재가급여 확대, 통합재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
 - (간병)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,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 등
- (건강·의료보장) 필수의료 보장(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, 공공정책수가 도입, 소아응급인프라 확충), 비대면진료 제도화, 건강·정신건강(마음투자 지원) 서비스 확충
- (안전한 일상) 출생부터 중단없는 아동보호체계(보호출산제, 학대 발굴·예방 등), 폭력(교제폭력, 스토킹 등)·범죄 피해자 맞춤 지원,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등
- (교육) 기초학력 밀착지원 및 디지털 튜터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,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자 지속 확대 등 미래역량 중심 교육서비스 제공
- (교통·문화) 저상버스·특별교통수단·BF(無장애물 환경) 인증·통합문화이용권 확대

⑤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

- (품질관리) 이용자 만족도 중심 서비스 품질 평가 및 품질인증제 확대
- (공급 관리)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등을 통한 제공기관 규모화·다변화 지원, 제공인력 자격제도 관리(결격사유 표준화 등) 및 역량개발·경력관리 강화
- (규제 합리화) 신규 진입 촉진, 평가결과·운영 부실기관 관리,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상한 기준 완화 및 본인부담 차등화 등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

⑥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

- (통합서비스) 교육-돌봄(유보통합), 복지-고용(국민취업지원),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
- (지역격차)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기반 지역격차 실태 파악, 취약지 지원
- (전달체계) 분절적인 공공·민간 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·개선 방안 검토

3. 사회보장체계 혁신

⑦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개혁

- (국민연금) 노후소득보장, 세대간 형평성 제고, 재정안정화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추진
- (고용보험) 소득기반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 및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
- (건강보험)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여 지불제도 다변화, 의료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재정비 등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하여 건강보험 운영 내실화
- (장기요양) 적정 보험료를 결정 등 안정적 재원확보 노력과 급여이용관리 강화

⑧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

- (통합관리) 중앙·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결과(DB화)를 토대로 사업군별 유사·중복성 및 누락·부족 영역을 점검 및 관리
- (전주기 관리) 사업 기획단계의 컨설팅·교육 등 사전협의 내실화·모니터링
→ 사업 시행 후 데이터·통계 기반 성과 평가를 통한 정책환류 강화
- (중앙·지방 협력) 중앙은 전국적·통일적 기준이 필요한 급여를, 지방은 맞춤형 서비스 중심의 상호 사회보장 역할분담에 따른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

⑨ 기술 기반 서비스·행정체계 도입

- (스마트 서비스) 노인·장애인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기술 개발·활용, 복지기술 육성 발전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등 지원
- (행정체계 고도화) 복지멤버십 확대, 온라인 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 사회 보장급여 신청주의 보완, 행정데이터 등 활용 근거기반 정책 수립 지원

V 향후 추진계획 및 이행관리

- (범부처 협력) 15개 부처 협력, 3대 전략 - 9대 중점과제 - 27개 핵심 과제 추진
- (이행관리)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(중앙부처) 수립 및 지역사회 보장계획(지자체) 연계('24.1월~)

※ 보도자료 참조(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)

4 중앙정부 복지현안

사회서비스제공기관 10곳 중 6곳(59.4%) 10인 미만 사업체

<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>
< 로봇,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활용 희망률 50% 이상으로 높아 >

- *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운영 실태, 고용 및 재무 실태, 디지털 전환 실태 등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「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」 결과를 발표
 - 해당 조사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근거 기반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년마다 수요 조사와 공급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
 - '09년부터 2년마다 수요·공급 실태조사를 같이 실시하였으나, 조사 대상 확대 등 조사 내실화를 위해 '21년부터 수요와 공급을 분리하여 격년마다 각각 실시('21, '23년 수요, '22, '24년 공급)
 - 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,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고, 방문조사 및 웹조사를 병행하여 실시, 8대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1,000개, 종사자 2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'19년 공급 실태조사 보다 조사 대상이 확대된 점에서 의미가 있음
 - 조사원 교육을 완료한 전문조사원이 조사표 기입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추후 약속된 기일에 조사표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(방문유치조사)
- * 조사 결과 종사자 규모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절반 이상(59.4%)이었으며, 제공기관 대다수는 개인사업체(54.7%)인 것으로 나타남, 대부분 기초자치단체(시군구 또는 읍면동) 중심(83.4%)으로 사업을 운영 중으로 전국 단위 사업체는 6%에 불과함,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제공기관은 48.9%, 또한 서비스 제공 시 디지털 기술*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15% 미만에 불과하지만, 향후 활용 희망률은 50%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남

※ 보도자료 참조(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)

5 중앙정부 복지현안

고립·은둔 청년,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.

< 2023 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, 관계부처 합동, 「고립·은둔 청년 지원방안」 발표 >
< 정부 차원 첫 개입, 21,360명 정책대상자 발굴, 1,903명 즉시 지원 >

* 4대 주요 과제

1. (발굴) 고립·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

- * 고립·은둔 청년 대상 중앙차원의 상시 발굴체계 구축
 - 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하여, 24시간 누구든지 고립·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고립·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비대면·온라인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윈스톱 도움창구 마련함('24. 下~)
 -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, 편의점 등 주변에서도 위기징후가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하여,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('24. 下~)

< 심층조사 결과 >

- ▶ 돈을 덜 들이면서 시간소요가 가능한 온라인 활동에 하루의 많은 시간 의존(38.8%)
- ▶ 외부활동이 적은 만큼 대부분의 고립·은둔 청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외부정보를 인지(73.2%)

- 도움요청은 '24년도 고립·은둔 청년 시범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과 연계하여 사례관리사의 현장방문, 초기상담 등 통한 전담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
- 또한 복지부 청년인턴을 활용해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고립·은둔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집중 발굴 및 온라인 자가진단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, 지자체-경찰-소방-지역주민(고시원, 원룸촌, 편의점 등)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망과의 협조체계도 강화

- ▶ “편의점에 가야할 때도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” (청년 당사자 E)
- ▶ “휴대폰에 걸려오는 전화가 무섭고 내가 타인에게 전화 거는 것조차 무섭습니다” (청년 당사자 F)

-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공식으로 공적 도움을 요청(개인정보 제공 동의)한 당사자들도 1,903명이나 나타남,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가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에 들어갈 예정
- 고립·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청년기관 내 탈고립·은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립준비와 병행하여 고립·은둔예방 프로그램 지원 강화('24.~, 6개 시도 10명)
 - 일반청년 대비 고립·은둔 위험도 약 3배(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중 자가진단 결과, '23.11월)

2. (전담지원체계) 2024년 고립·은둔 청(소)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

- * 2024년 4개 지역에 지역 내 고립·은둔 청(소)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관((가칭) 청년미래센터) 설치
 - 공모를 통해 4개 광역시·도를 선정하여 고립·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(’24년 약 13억 원, 총 32명 전담인력)을 실시할 예정으로, 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 배치된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후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

- ▶ “ 마음 놓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다. 상담이든 뭐든 받고 싶지만 어떻게 어느 곳에 해야 하는지 찾아보다가 포기한다.” (청년 당사자 E)
- ▶ “고용노동센터나 일자리센터는 자신감이 없어서 못 갔어요.” (청년 당사자 H)
- ▶ “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, 청년들이 어려울 때 터놓고 상담받을 수 있는 전담 기관이 없어서 힘들었어요.” (서울시 자체사업 참여자 대상 간담회 중, ’23.6월)

[고립·은둔 사례관리 주요 지원내용]

프로그램	주요 지원내용	비고
초기상담	· 자기이해 워크숍, 심리상담(개인, 집단, 방문, 온라인상담 등) 등 마음건강	자가 진단
일상회복	· 일상생활 회복활동*, 사회관계 형성,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* 은둔자 주축 참여한 SNS ‘일상생활 챌린지’ 등 * 신체/예술/놀이활동/3끼 식사 등 * 독서/요리/가드닝 모임 등 · 공동생활 홈(Home) (수면 및 위생 관리, 정리정돈, 식습관 개선 지원 등)	관계 형성 은둔 특화
가족·대인관계회복	· 청년층 이해·소통 교육, 가족 심리상담,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· 당사자 파악 및 1:1 멘토/멘티 활동 운영·관리 * 탈 고립·은둔 성공경험 청년, 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구성	부모 참여 대인 접촉 소통 기술
일 경험	· 청년성장프로젝트, 청년도전지원사업(고용노동부) 등 연계 * 자조모임,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(일경험 등) 지원 연계	사회 복귀 시도

-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 및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확대를 추진할 계획
- *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
 - 초기상담 시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따라 ‘청년마음건강서비스’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, ‘일상돌봄서비스**’를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청년들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,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1인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낮추고, 혼자 갑자기 아픈 경우 등에 대비한 인적 보호망을 강화
 - 읍면동, 복지로 사이트 신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통해 의뢰된 대상자에 이용권(바우처) 지급, 등록된 민간기관에서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(총 10회)
 - 돌봄·가사·병원동행·식사·영양관리 등 바우처 서비스(23년 시작, 현재 51개 시군구 실시 중, 23년 196억 원 → 24년 335억 원)

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2024년부터 고립·은둔 전담 사례관리 인력들이 배치될 예정(총 36명)이며,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활용, 보건복지부, 여가부와 협업하여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 청년특화 공동생활·커뮤니티 등 필요한 공간 마련을 도울 계획

3. (예방) 학령기, 취업,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

- * 2024년부터 13~19세 학령기,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,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
 - 학교 내 ‘(가칭)통합지원팀’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하여, 학교폭력,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
 -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(’23. 96개교 → ’24. 248개교)

☞ (통합지원팀 구성 예시) (위원장) 교장 또는 교감 / (위원) 교무·복지·생활부장, 보건·영양·상담교사, 교육복지사 등 / (사안별 담당) 기초학력, 학교폭력, 다문화 등 분야별 담당교사

-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’로 연계하도록 하여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임 아래 지역사회 내 위기학생들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
-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,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(가칭)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(’24년 10개 지자체, 224억 원)하고,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(’23년 408억 원/8천 명 → ’24년 425억 원/9천 명)하는 등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, 사례관리와 함께 적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
 - 아울러 온보딩(On-Boarding) 프로그램*을 신설(’24년 44억 원)하여 경직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취업초기 청년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

- ▶ “이벤트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간 진행되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.” (청년 당사자 B)
- ▶ “교통비도 올라서 이젠 가끔도 못나간다. 4개월간 밖에 나간 적이 없는 것 같다.” (청년 당사자 D)
- ▶ “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.” (청년 당사자 G)

-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케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(’23년 5개소 → ’24년 9개소)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

4. (관리·제도화)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, 법적근거 마련

- * 사례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(희망e음)을 통해 지원하고,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,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관리체계도 효율화

- 2년간의 고립·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, 정보보호,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
- ※ 보도자료 참조(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청년정책팀,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,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,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,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,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,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)

6 중앙정부 복지현안

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

< 주거·일자리·교육비 등 경제·구조적 요인, 경쟁압력·비교문화·젠더갈등 등 문화·심리적 요인 등 전 분야의 개선과제 검토 >

< 특단의 대책 발걸을 위해 '전문가 및 대상자 릴레이 간담회 추진' >

- * 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힘
 -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「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(3.28)」을 마련하였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
 - 1) 돌봄과 교육, 2) 일·가정 양립, 3) 주거 지원, 4) 양육비용 지원, 5) 난임·건강
 - ▲ 아동정책추진방안(23.4월), ▲ 난임·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('23.7월), ▲ 가족친화적 세제개편 방안('23.7월), ▲ 다자녀 가구 지원대책('23.8월), ▲ 출산가정 주거지원 확대('23.8월)
 - 또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'인구정책기획단'을 구성(6월~)하여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아젠다로 삼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
 - (공동단장) 복지부·기재부 제1차관, 저고위 상임위원, (구성) 저출산·고령사회대응분과(복지부 주관),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(기재부 주관) 아래 12개 작업반 운영
 - * 먼저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5대 핵심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여 수정판을 마련함
 - 또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·돌봄서비스·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·양육지원은 물론이고 주거·일자리·사교육·수도권 집중 등 사회·경제적·구조적 문제, 비교문화·젠더갈등 등 문화·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함
 - 이를 위해 전문가, 청년부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,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, 지난 12월 6일(수)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, 미래학, 방송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 수렴
 - 12월 15일(금)에는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인구·경제·사회복지·아동학, 경제학 전문가* 등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. 이후에도 기자·논설위원 등 언론계, 산부인과·소아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

- 이와 함께 청년 부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. 이른바 ‘패밀리스토밍(Family Storming)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
- 지난 12월 7일(목)에는 결혼은 하였지만 자녀가 없는 가구와 간담회를 가졌으며, 12월 19일(화)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
- (패밀리스토밍 추진 계획(안)) ①둘이서 살아요(무자녀가구, 12.7일 既 개최) → ②육아휴직 가정 간담회 → ③혼자서 살아요(미혼가구) → ④셋이서 살아요(1자녀가구) → ⑤여럿이 살아요(다자녀가구) → ⑥새롭게 살아요(비혼가구)
※ 보도자료 참조(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)

7 중앙정부 복지현안

한파 대비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실시

< 대설·한파 상황에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 당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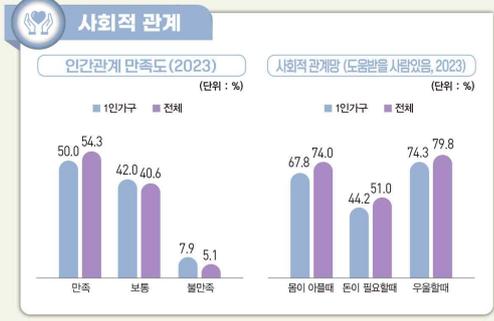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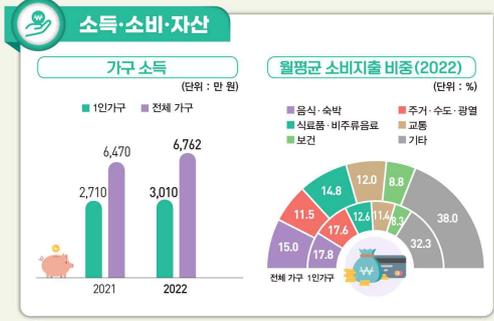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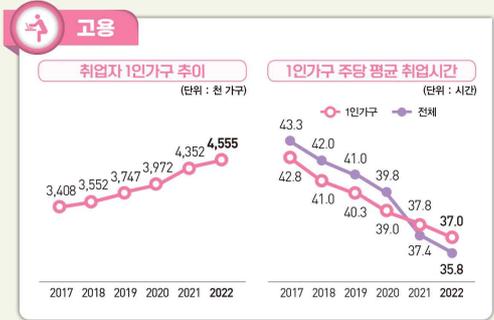
- * 보건복지부는 12월 17일(일) 대설 및 한파 상황과 관련하여, 독거노인,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, 지방자치단체, 민간이 함께 취약계층 안전점검과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함
 - 먼저,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나 유선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,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청, 아울러 독거노인, 장애인, 노숙인과 쪽방주민,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, 저소득층 등 지역별 취약계층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것을 요청
 - 또한,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명예사회복지공무원,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며, 사회복지시설에 폭설과 한파로 피해가 없도록 시설점검 및 제설, 안전사고 예방 등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안내함
 - 특히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, 경로당,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난방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함
 - *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과 협력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겨울 이불 등 방한용품 지원하고, 생필품, 난방용품 등 한파 피해 방지 물품도 지원할 예정
 - 아울러 12월 18일(월) 15시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대설,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
- ※ 보도자료 참조(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)

3. 통계로 보는 복지

1 중앙 통계현안

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

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



※ 자료 : 통계청 자료(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)